

학대 대응 정부 대책의 현황과 과제

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
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간담회

@20210129

김진석 (서울여대)

Ⅲ.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

	그간 대응	보완 과제	기대효과
초기 대응	▶ 대응인력 기본적 조사역량 교육	▶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전문성 강화 교육 ▶ 대응인력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▶ 적극 조치 위한 이행력 확보	초기 대응에서 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합한 조치 이행
대응 인력	▶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 * (학대건수 대	▶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확대	
분리 보호	▶ 즉각 분리제도 도입('21.3)	▶ 지자체 별 보호시설 조정 체계 마련	
처벌 및 인식 개선	▶ 아동학대처벌강화 TF 운영 ▶ 민법 상 '징계권' 폐지	▶ 양형기준 개선 제안 등 사법부 협력 강화 ▶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캠페인 ▶ 학교, 지자체의 학대 발견 강화	
입양 제도	▶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에 의해 진행	▶ 입양절차 전반 국가·지자체 책임 강화	결연·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입양 아동 보호 강화

최근 학대아동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

< 그간 대책의 주요 내용 >

「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」('18.3월)

- ▶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신설 및 위기아동 안전 확인 정례화
- ▶ 계부처 합동 '아동학대대책단*' 설치, 공공 지원체계 구축
- ▶ 아동학대대응과 신설('19.1월)
- ▶ 아동별 사후보호 계획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,
- ▶ 소 아동 주기적 모니터링

「아동학대 대응정책」('19.5월) - 아동학대 관련 내용-

- ▶ 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
- ▶ 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
- ▶ 수사조사 연 1회 실시('19~)
- ▶ 규정된 친권자의 '징계권' 용어 변경 또는 한계 설정

「아동학대 대응대책」('20.7월)

- ▶ 아동학대사건('20.6월), 창녕 아동학대 사건('20.7) 계기 대책 마련
- ▶ (단기)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 구성하여 학교 등 위기아동 정보 공유
- (대응체계)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 지자체 배치 '22→ '21년 단축
- (보호) 학대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
- (단계별 실효성) 대응인력 출입범위 확대,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규정 신설 등

□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」('20.10월)

- ※ 인천 미추홀구 방임 아동 화재사건('20.9월) 계기, 대책 보완 과제 마련
- (보완과제) 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 집중점검, 정서학대·방임 시 적극
개입방안 마련(돌봄서비스 신청 대행, 부모 반대에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)
- ※ '20.10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후 '아동학대 대응업무 지침' 개정
→ 적극적인 응급조치 시행으로 선제적 분리보호, 필수 대면조사 대상 확대, 영유아장애아동
학대 신고 시 병의원 필수 진료, 의료인 의견 우선 고려 등('20.'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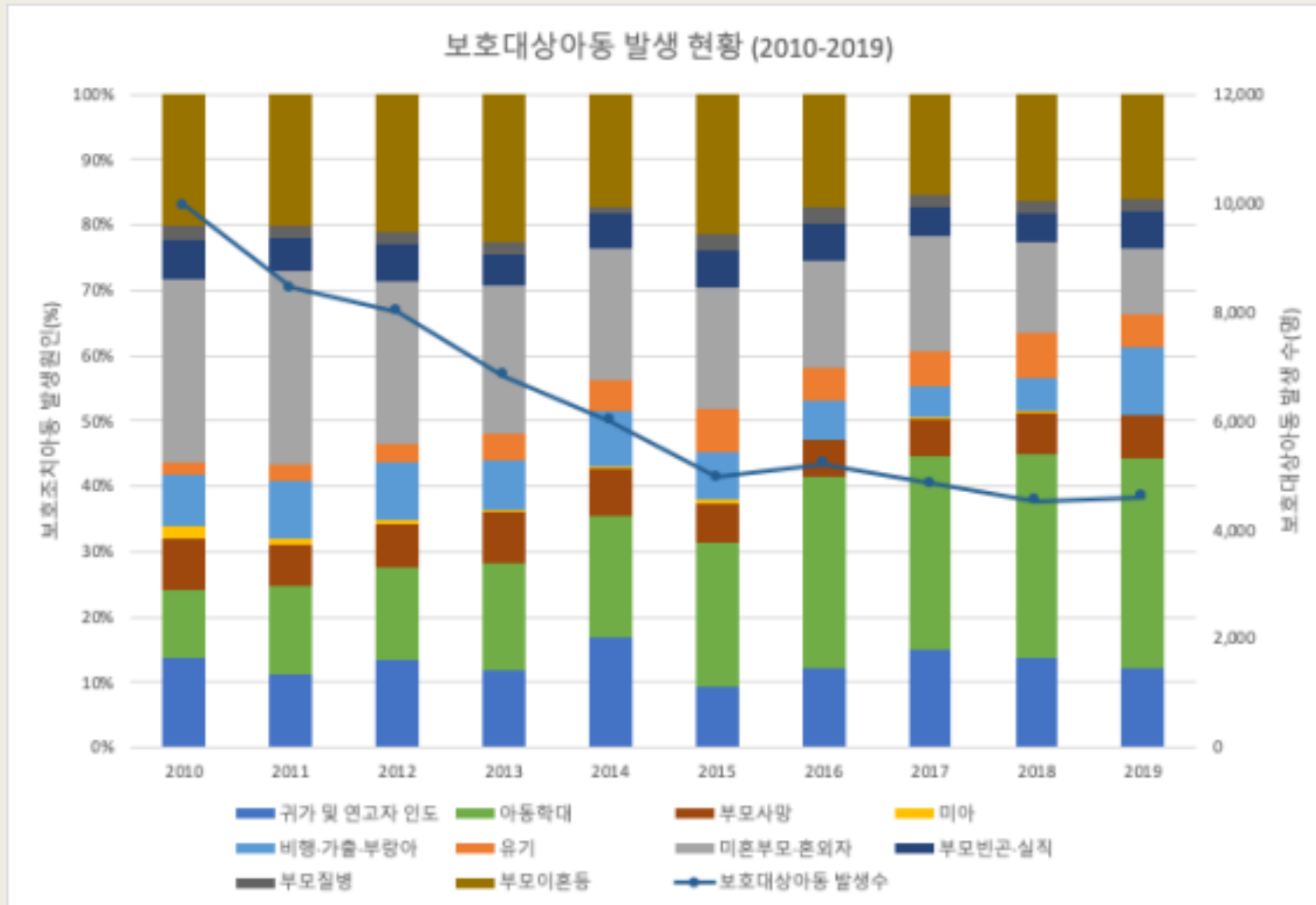
그럼에도 불구하고... 왜?

최근 주요한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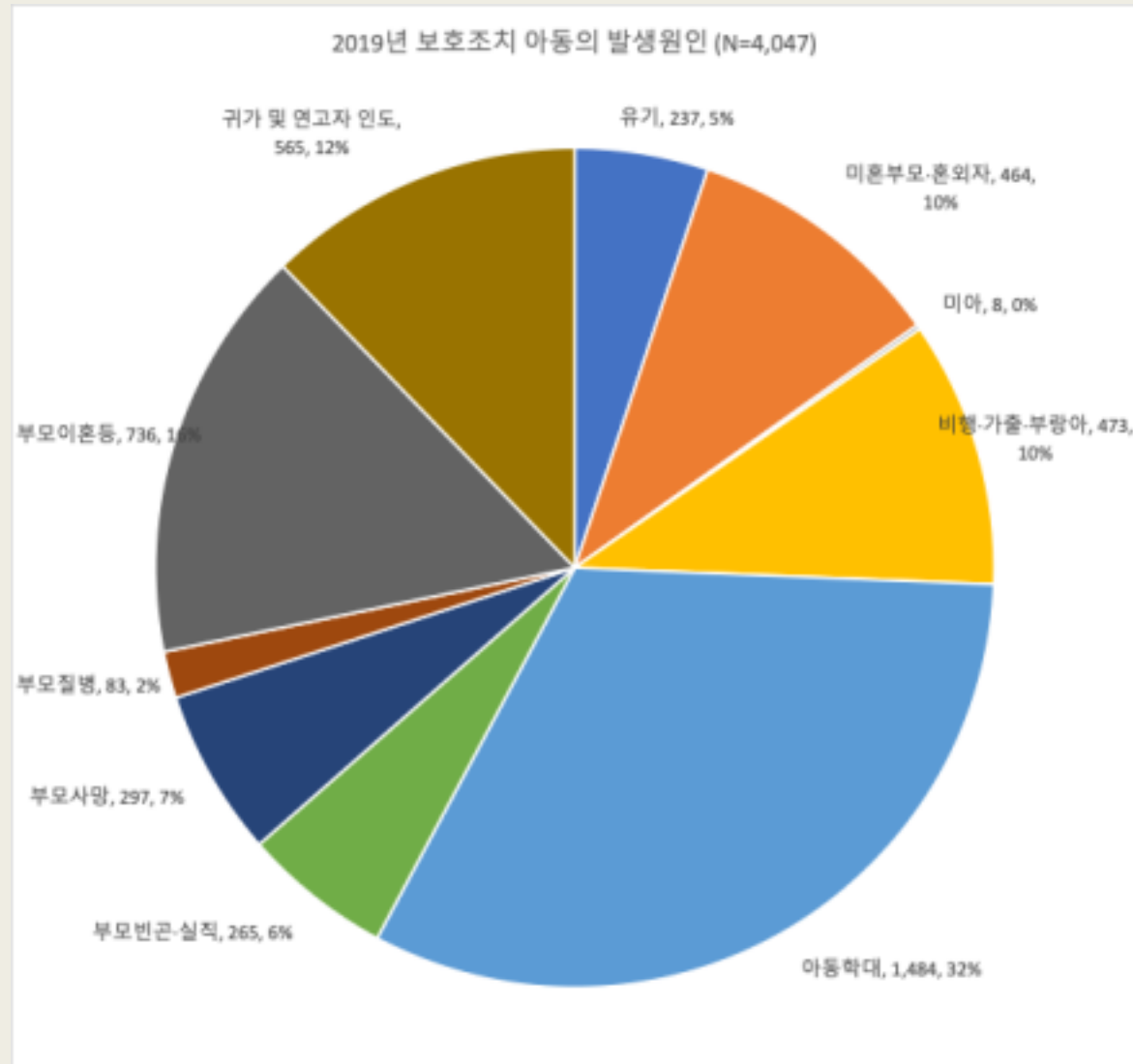
-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
 - 아동학대조사업무 지자체 이관
- 아동보호 공공인력 및 체계 강화
 - 118개 지자체 아동보호팀 신설
 -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(공무직 사회복지사) 배치
 -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021년까지 현재 262명에서 664명 확대 배치 예정

아동보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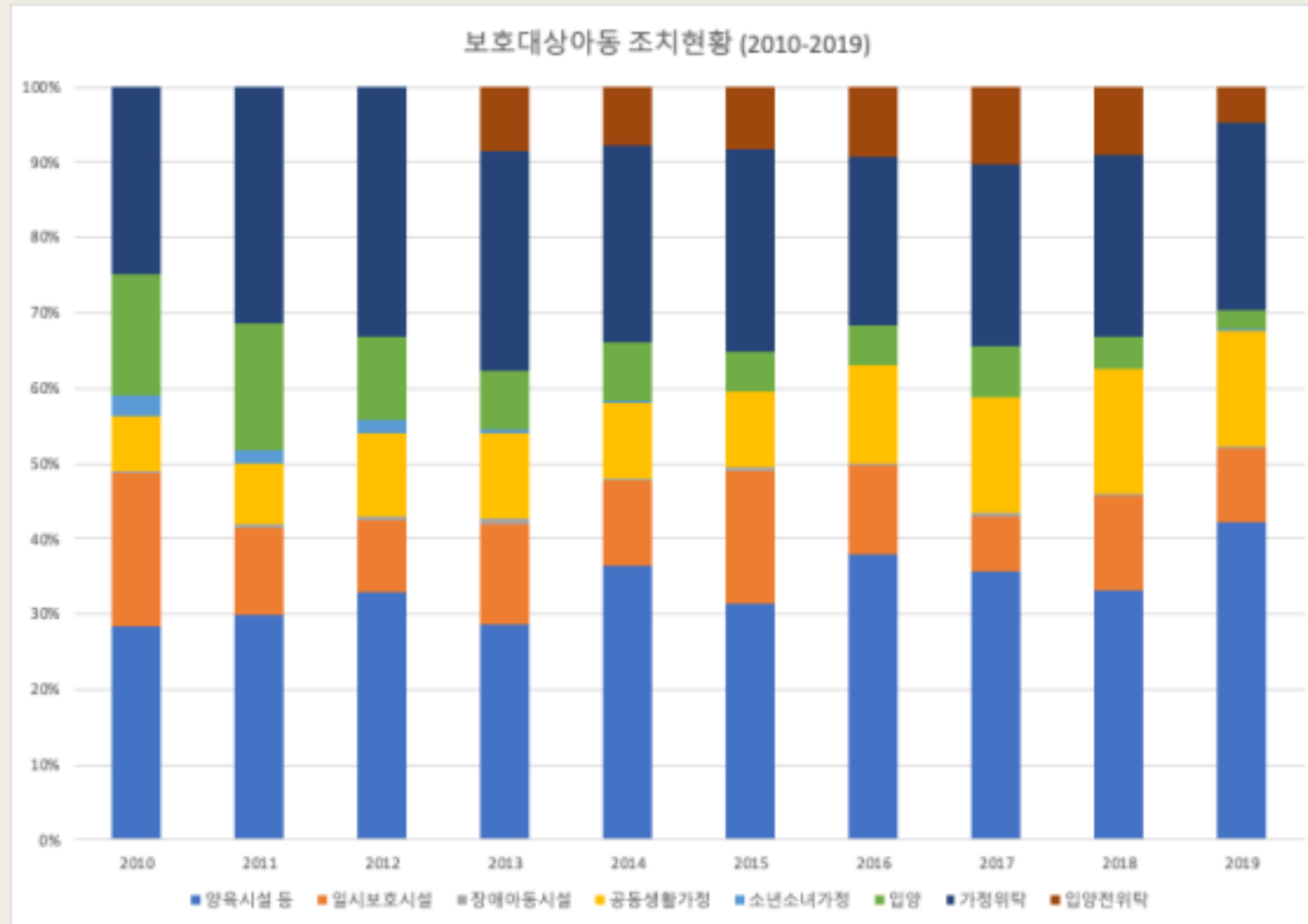
보호아동의 현황: 발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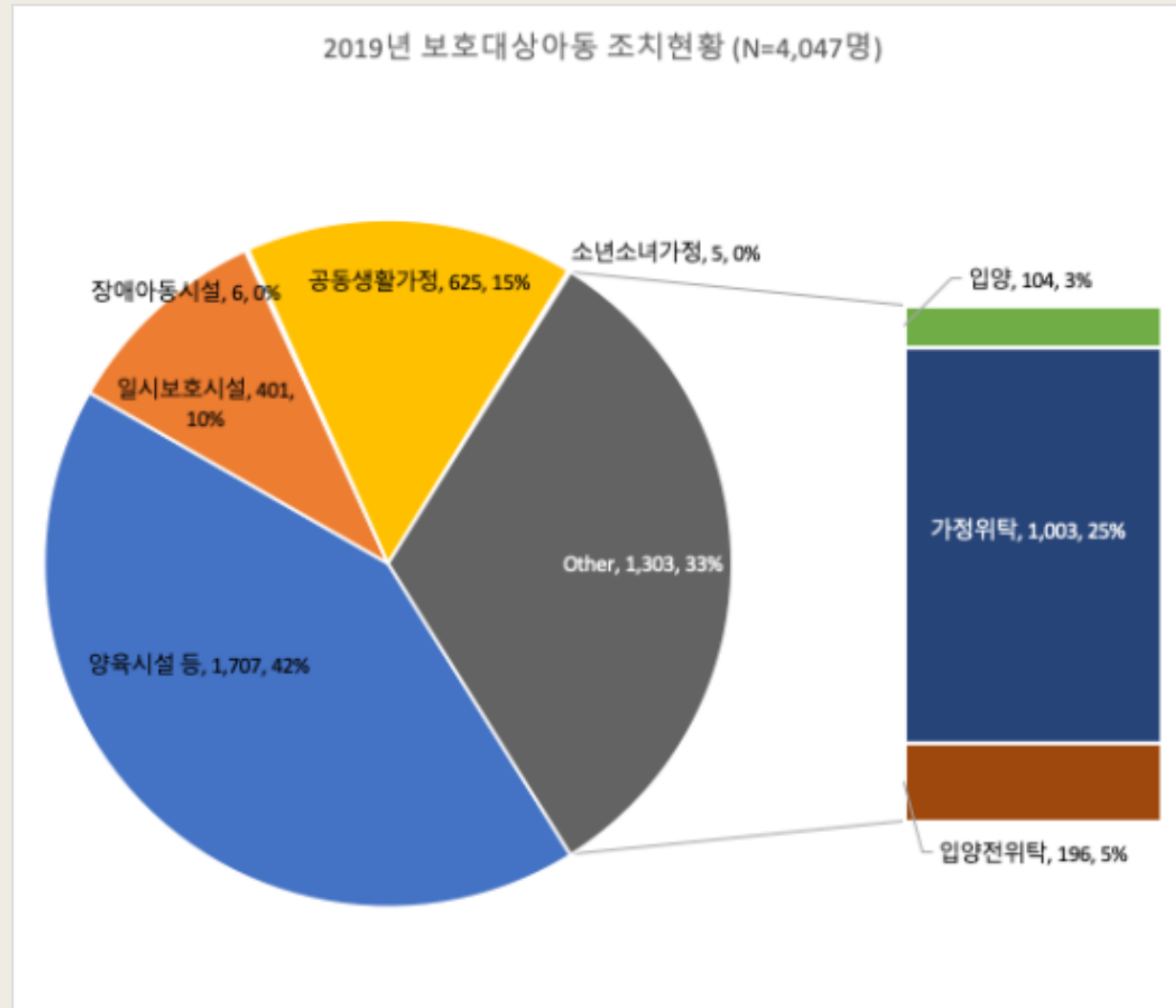
보호아동의 현황: 발생



보호아동의 현황: 조치



보호아동의 현황: 조치



보호아동의 현황 - 주요 특징

보호아동 발생

-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한 아동의 비율 크게 변동 없고 오히려 감소 추세
-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아동 발생 비율 꾸준히 증가
- 전체 보호대상아동 발생의 30% 이상 (이혼 16%; 빈곤실직 6%; 질병 2% 미혼부모 10% 등) 이 불가피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이유
 - 가족기능 지원 및 강화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유에 해당
 - 부모 이혼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 매우 높음

보호아동 조치

- 시설입소 아동의 비율 10년 연속 절반 이상 유지
 - 대규모 양육시설 입소 아동 비율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 추세
- 입양 비율 지속적 감소
- 가정위탁의 비율 정체

아동보호 체계 현황

아동보호체계의 현황

■ 아동복지 담당 행정 인력 및 조직의 절대적 부족

- *지자체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*

-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양과 질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담당 공무원
-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아동보호 업무 민간기관에 위임

- *위기상황 노출 아동에 대한 조사와 사후조치 담당 시설 및 기관*

- 기존 아보전에서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예 따라 조사는 지자체, 사례관리는 아보전으로 이분화

- *분리 아동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양육 체계*

- 대규모 양육시설-그룹홈-위탁가정-입양

아동보호체계의 현황

■ 민간기관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

- 아동보호와 아동복지 전반에 걸쳐 공공성의 부재
-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-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공급 부재
 -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, 아동복지 사각지대의 문제
- 최근까지도 아동학대의 접수 및 조사, 사례관리, 위탁가정 연계 및 지원, 입양가정 연계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위탁
 -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접수 및 조사 업무 지자체 고유업무로 전환 성과
 -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확보 및 배치 여전히 난항
 - '준비된'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양성 및 지원 방안 부재
 - 입양 관련 사안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절대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

아동보호체계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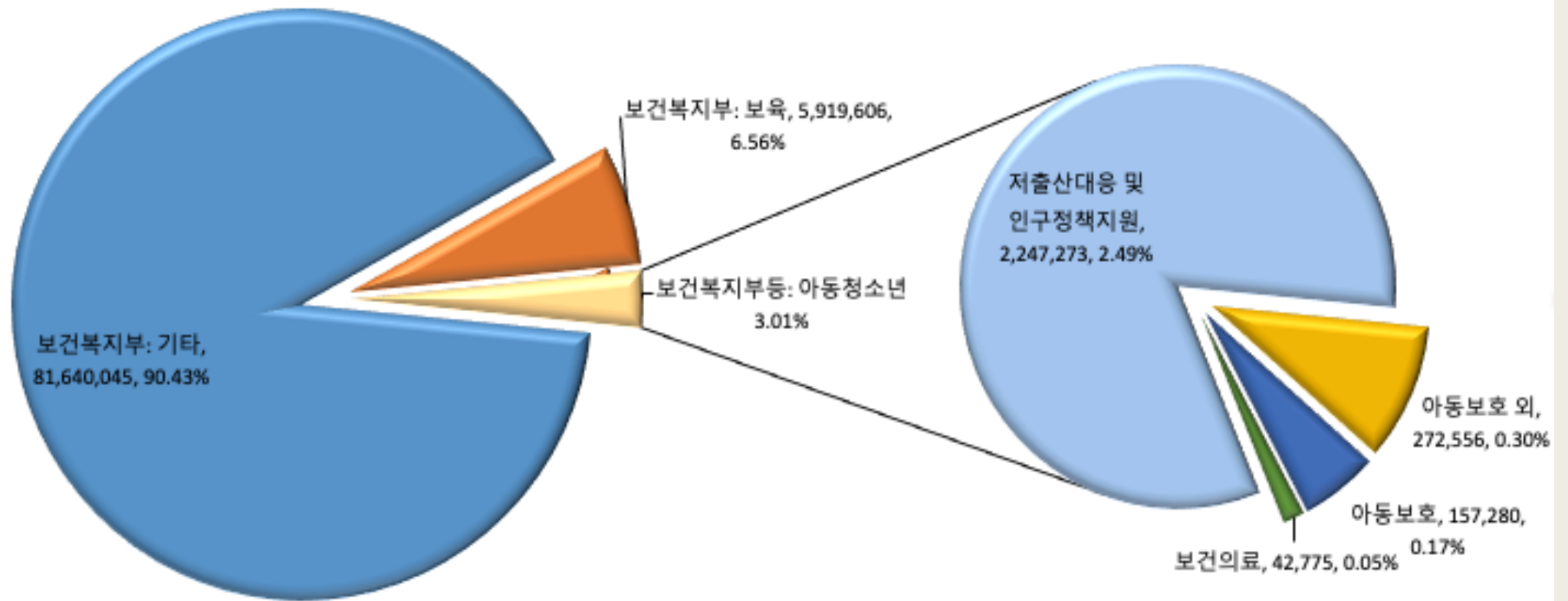
■ 지자체 수준 아동복지 종합조정체계의 부재

- 아동복지 관련 필수 서비스조차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 가중
- 아동권리 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저해요인

아동보호 예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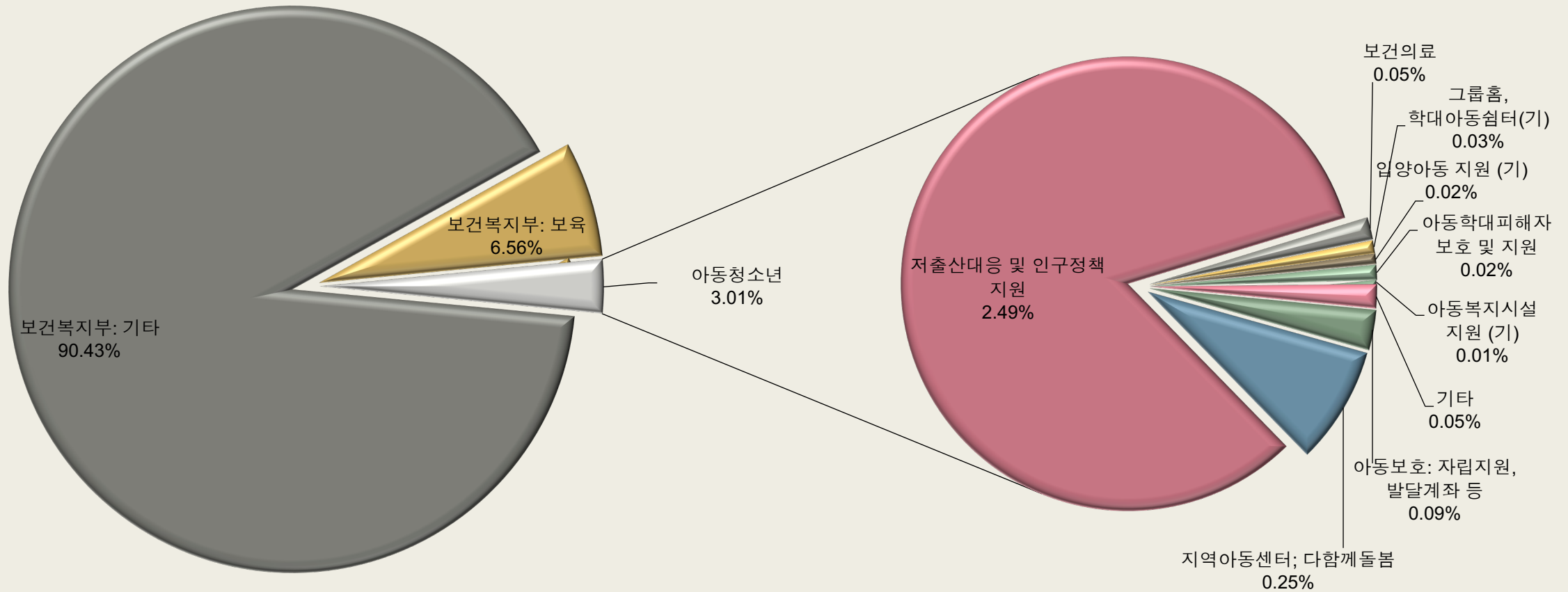
아동관련 예산 구조

아동청소년 예산 구조 (보건복지부 + 기금): 2021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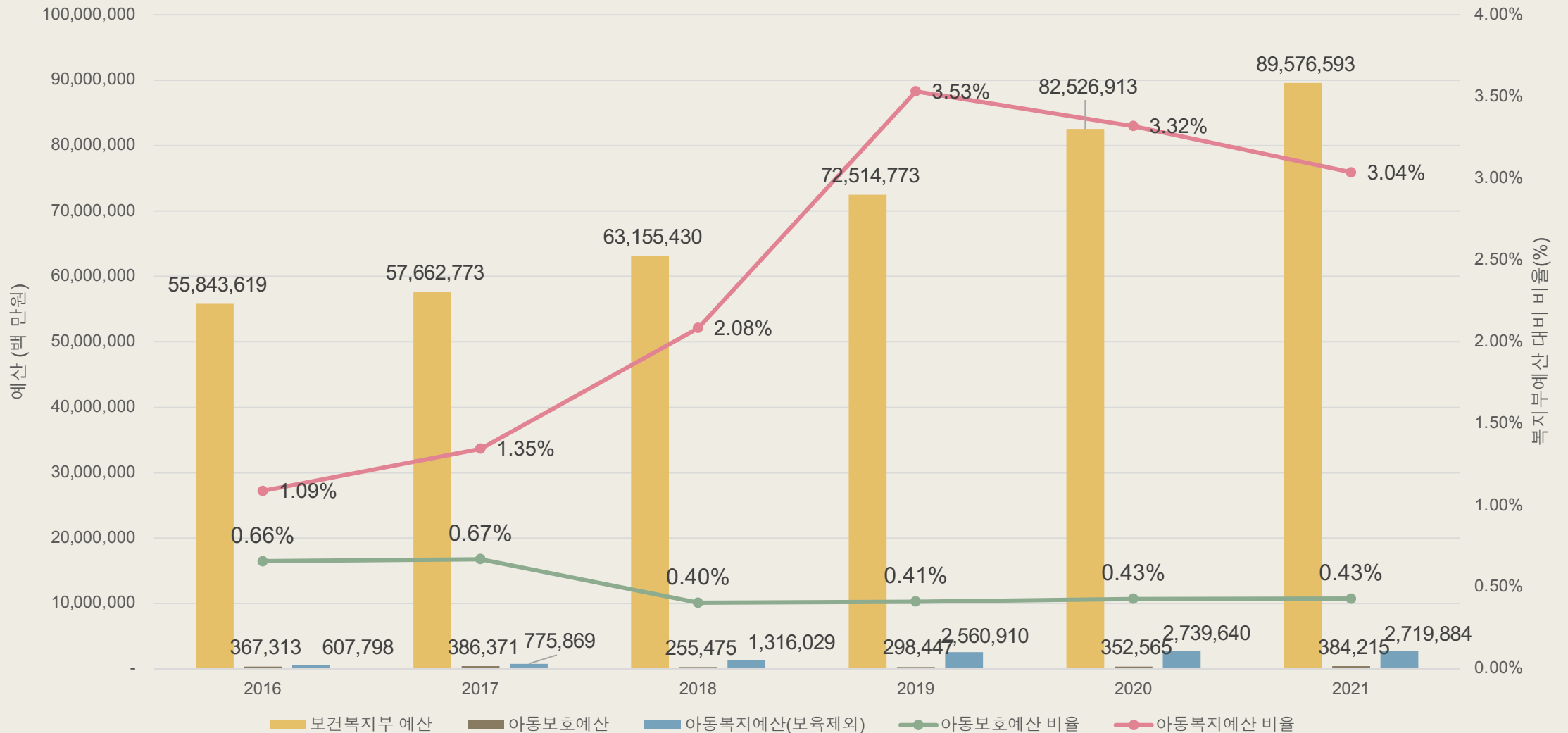
아동관련 예산 구조: 상세

아동청소년 예산 구조 (보건복지부 등): 2021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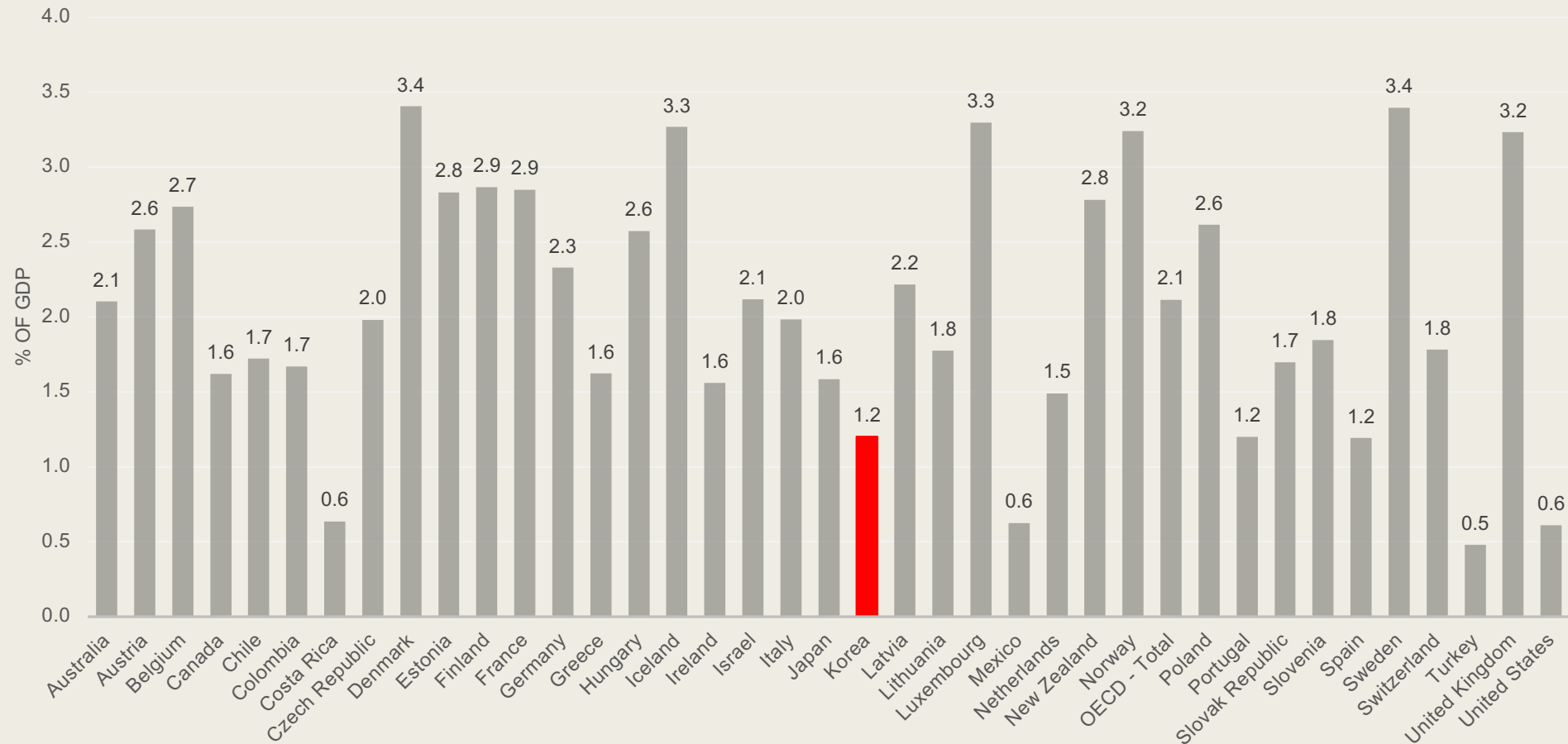
아동관련 예산 추세

보건복지부-아동청소년-아동보호 예산 추세



아동가족관련 공공지출 국제비교 (2019)

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



Source: Social Expenditure: Aggregated data/<https://data.oecd.org/socialexp/family-benefits-public-spending.htm#indicator-chart>

아동보호 과제

아동보호체계 운영의 원칙과 방향

■ 원칙

- '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' - 유엔아동권리협약

■ 주요 고려 사항

- 아동보호 세 가지 요소의 균형적 접근

■ 1차 지원

- 가족기능 강화와 양육 지원을 위한 보편적 접근
- 예: 아동수당

■ 2차 지원

- 위험요소에 노출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집중적 지원
- 예: 드림스타트, 가족상담

■ 3차 지원

- 일시적/영구적 분리가 불가피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일시적, 집중적 지원
- 예: 그룹홈(학대피해아동 쉼터), 위탁가정

■ 그리고 입양...

아동보호체계 개편 방안

■ 원가족 분리의 원천적 예방에 집중

- 2차 예방적 접근 뿐만 아니라 1차 예방적 접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개념 전환
- 이혼에 의한 아동 분리 예방을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
 - 젠더와 성평등의 문제: 양육부담 합리화
 - 사회적 낙인의 문제

■ 공공책임 지역사회 보호 강화 - 탈시설

- 아동보호의 공공 책임성 강화
-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 (예: 가정위탁 저변확대, 소규모 공공 공동생활가정 확대 등) 확대 및 강화
- 지자체의 아동보호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 타워 기능 실질화

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

-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 실질화 방안 모색
 - 아동복지 예산 구조 정상화
 - 현재 범피기금과 복권기금에 의존하여 확장성과 안정성 부재
 -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양성 및 지원 방안 마련
-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 인프라 확충
 - 지역사회 학대아동쉼터, 그룹홈 확대
 -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선언 및 단계적 폐쇄
- 공공책임 입양체계 구축
 - 입양특례법 개정
 - 해외입양 일몰 선언

획기적인 수준의
자원 확대 필수적!!